박연차게이트·용산참사 난타전 예고

효성 비자금 의혹 등 폭발성 현안 수두룩
민주, 盧 전대통령 서거 책임론 제기할 듯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등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감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감 전망

이번주(12~16일)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하면서 10월 재보선을 향한 야당의 공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운찬 국무총리의 국회 위증 등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박연차 게이트'와 용산참사, 효성 비자금 부실수사 의혹 등 폭발성 있는 현안들이 국감에서 줄줄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검찰에 대한 국감에 돌입하며, 행정안전위는 경찰청과 서울시경,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곳곳에서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와 행안위에서는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용산 참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파상공세를 벼르고 있다.

또 정무위와 기재위에서는 효성 오너 일가가 연루된 비자금 의혹과 4대강 예산 배정 문제가 다뤄지고, 국토위와 행안위에서는 한나라당의 예비 대권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국감장에 선다.

경기도 국감에서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김 지사의 태도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세종시 문제가 다시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야권의 대공세에 맞서 한나라당은 건설적 대안 제시를 통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은 무엇이든 흠집을 내기 위해 정책국감을 포기한 상태"라며 "한나라당은 정책국감이라는 국정감사의 기본 원칙을 지키되 야당의 허위 폭로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감중반 정국 주도권을 잡느냐가 재보선 승리의 주요 변수라는 인식 아래 여권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감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이번 주는 검·경 등 권력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 만큼 인권 탄압과 각종 의혹규명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鄭총리, 도덕성 공세 피해 갈까

민주, 청문회 이어 국감서 의혹 제기
대정부질문서 이미지 만회할 지 주목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에도 도덕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야당의 파상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정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병역,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상처를 입은데 이어 지난 5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추가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국감에서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민간연구소 고문과 장학재단 이사 겸직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하며 정 총리를 위증 총리로 몰아세웠다. 이번주 국감에서도 이같은 파상공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은 2기 내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강한 행정 장악력과 추진력이 요구되는 임기 초반에 도덕성 논란이 거듭되자 곤혹스런 분위기다. 야당의 공세가 지나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11일 "말꼬리 잡기식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현재로서는 총리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리실 측은 일단 정 총리가 이달 24일까지 열리는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아 야당의 공세를 직접 받지는 않지만 내달 5~11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출석할 수 밖에 없어 야당의 파상적인 공세에 맞닥뜨려야 해 긴장하고 있다.

이에 정 총리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정부부처 업무보고 청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정 전반에 걸친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 수립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뒤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된 장인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가 취임 후 충청 지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석 연휴에 용산 참사 유가족을 방문하는 등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느라 성묘를 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대강사업 3조원 편법 발주"

강운태 의원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 강운태(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가 국회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발주하는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실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토해양부와 조달청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4대강 12개 공구에 대해 공구별로 1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정해 3조3천9억원 상당의 공사를 긴급 입찰토록 요청했고, 이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3조320억 규모의 공사에 대한 발주를 마쳤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안에 같은 방식으로 3조원 규모 공사에 대해 입찰을 추가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12억원의 예산으로 3조320억원의 공사입찰을 끝냈는데 이는 불과 0.03%의 예산으로 전체 공사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더욱이 국토부는 공문에 구간별 총공사금액을 명기하고 이번에 배정한 1억원 사업은 착공 후 90일 이내에 끝내고, 전체 공사는 780일 이내에 각각 마치도록 못박아 사업의 졸속추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원순 "개혁세력 내년 지방선거 참여해야"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민주개혁 세력과 역량있는 활동가들의 출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10일 강진군 다산 수련원에서 열린 '2009 전국시민운동가대회'에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과거처럼 낙천·낙선운동 만으로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에 직접 후보로 나설 생각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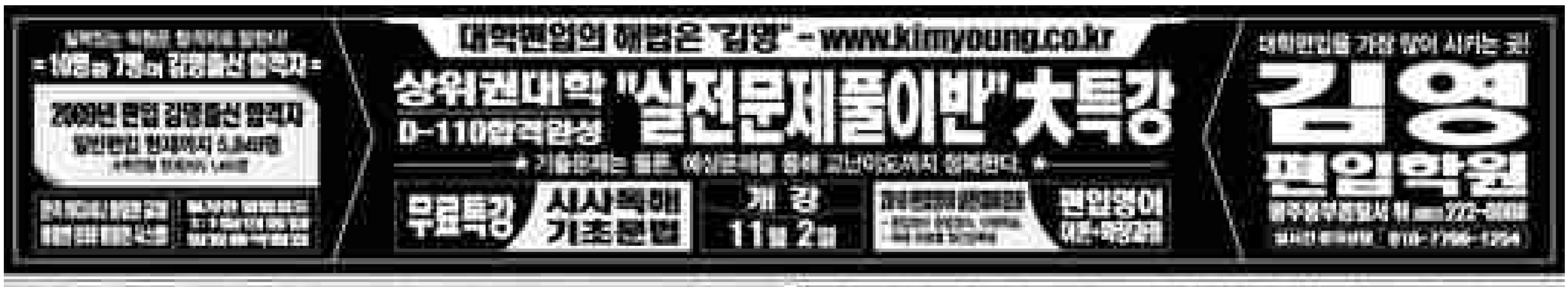
박 이사는 "민주세력 결집과 역량있는 활동가들의 정치참여를 돕고 그들을 지지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박 이사는 이날 진행된 '박원순과 희망찾기'라는 특강을 통해 시민운동과 2010년 지방선거 등에 관해 전국에서 온 200여명의 시민운동가와 다양한 고민을 나눴다. 박 이사는 현재 시민운동에 대해 "시민운동의 위기라기보다는 '시민운동가들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시대와 상황이 변하고 있는 만큼 활동가들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16일 시·도 교육청 국감

국회 국정감사 2주째인 이번주(12~16일)엔 광주·전남지역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충북 진천군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기상청과 함께 광주지방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15일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부산항만공사에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전남도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 뒤 오후 3시엔 전남대로 자리를 옮겨 전남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같은 날 10시 농식품위는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